

야권 무르익는 탄핵론에... 與, 텃밭 찾아 “지켜달라”

민주 '김건희 특검법' 촉구 집회... 혁신당 '임기 단축 개헌 연대' 추진 진보당, 연말까지 탄핵 국민투표 진행...국힘, 대구·경북서 결집 호소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촉구 서울역 집회를 여는 등 정부와 여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 장외집회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목적이자"고 맞섰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형배·장경태 국회의원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함께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를 만들겠다고 하며 의원 모임을 시작했다.

당내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 절차가 진행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판적 전망이 우세하다"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하면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또 전날 민주당이 주최한 장외 집회에서 최고위원들의 탄핵 촉구 발언도 나왔다.

이 집회에선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김민석 최고위원), "윤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이인주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을 내려야 한다"(김병주 최고위원) 등의 발언이 잇따랐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끌어낸 2016년 촛불집회를 상기시켰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상 탄핵 여론전에 불을 댕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조국 야당은 노골적으로 탄핵 돌입을 주장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총선 때부터

윤 대통령 탄핵의 의미로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진보당도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고 연말까지 탄핵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대구·경북을 찾아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오늘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정권을 비판하고 정권을 탄핵하려는 음모를 우리의 목소리로 이겨내야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지역 당원들에게 "여러분이 압도적인 지지로 탄생시킨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민생과 안보가 모두 위중한 시기에 다시 정쟁에 고삐를 죄고 있다"며 "이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맞춤형 방탄 집회임을 국민이 모두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장외 투쟁은 민생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산적한 민생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국민 명령을 되새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란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집회를 두고 "이 대표가 범죄혐의자인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읍소하는 것"이라며 "머릿수로 위력을 과시해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재명 무죄'라는 여론을 조성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속셈"이라고 논평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외집회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밑자락을 까는 빌드업 과정"이라며 "정작 탄핵받아야 할 1순위는 이 대표"라고 적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준태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소상공인 75.7% “복합쇼핑몰 유치 찬성”

시의회 설문... 40.7% “1곳 찬성 3곳은 반대”... 24.3% “한곳도 안돼”

광주지역 소상공인 중 복합쇼핑몰 유치 자체를 반대하는 비율은 24.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안평환)는 3일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하여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일반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다.

여론조사 결과 소상공인은 복합쇼핑몰의 유체에 대해, '1개 유치는 찬성 하나 3개 유치는 반대' 40.7%, '3개 유치 모두 찬성' 35%, '유치 자체 반

대'가 24.3%순으로 조사됐다.

복합쇼핑몰이 기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민과 소상공인은 평균 56.4점과 34.42점으로 시민은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하고, 소상공인은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의미한다.

소상공인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종합필요도 점수는 64.55점으로 '구내 포인트 일부 지역 화폐 전환'이 67.6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구도심 연계 상권활성화 지원'이 66.93점이었다.

반면 소상공인의 종합필요도 점수는 73.83점이었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이 82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증지원 규모 확대'를

80점으로 높게 응답했다.

소상공인 상생방안의 추진을 위한 필요 자원 분담에 대한 질문에는 평균100점 만점 중 시민 55.11점, 소상공인 55.42점으로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복합쇼핑몰 사업자가 광주시보다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여론조사는 (주)폴인사이트에서 조사를 수행했으며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7포인트)과 광주광역시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만 20세 이상 소상공인 300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5.65포인트)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및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결과는 광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밖으로 나간 민주...대여 총공세

서울역 앞 집회 현역 의원 170여명도 참석...천만인 서명운동 돌입

더불어민주당은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대여(對與)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에 약 30만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170명의 현역 의원도 대부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정농단 진상규명'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울역 앞부터 승례문, 시청으로 이어지는 4차로 도로를 메웠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는 어떤 불법에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며 사실상 대통령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른다. 장님 무사를 조종하는 주술사 김건희가 나라를 지배한다"며 "김건희 특검을 관철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명목상 '김 여사 특검법 촉구' 집회였지만,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지도부의 발언과 구호가 분출했다.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한다.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박정희보다 잔인하고 전두환보다 뻔뻔한 부부 낱강도는 그보다 더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민주 공화의 적들이 잠시 벌린 개판을 평정하고 대한 공화를 다시 선포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지역별로 장외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주당은 또 이날 '김여사 특검법 통과 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국힘 시도지사 “국정 쇄신·당정 단합 필요”

尹·한동훈 태도 변화 촉구 입장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사·도지사업의회는 3일 정치 위기 타개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국회를 장악한 야당은 이제 대통령 탄핵까지 거리낌 없이 시도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과 당내 불협화음은 당원과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해 집권 세력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의회는 가감 없는 국민 의견을 전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표를 향해선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협의회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주요 국정과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해 정상 정치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지방행정의 책임자이자 중진 정치인들인 국민의힘 사·도지사들은 위기의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정상 정치 복원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